

[기획논문] 보이지 않는 감옥: 기술 매개 강압적 통제와 스토킹*

배성신**

초 록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가해자에게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통제 수단을 제공했다. GPS 추적기, 위치 추적 앱, 원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SNS 감시, 계정 해킹 등의 기술은 물리적 접촉 없이도 피해자의 삶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도구로 악용된다. 그러나 현행 법과 제도는 여전히 물리적 폭력을 중심으로 작동하며, 디지털 통제와 감시는 개별 법률로 처벌될 수 있지만, 가해자의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통제 패턴을 반영하지 못한다.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감시와 통제 사례가 증가하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젠더 기반 폭력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 매개 강압적 통제(Technology-Facilitated Coercive Control, TFCC)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 법원의 스토킹 판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기술이 친밀한 파트너 폭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를 탐구한다. 연구 결과, 가해자들은 다양한 기술적 수단을 활용해 피해자를 감시·협박·통제하며,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통제를 지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공포와 무력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결국 법이 아닌 '가해자의 논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억압에 놓인다. 본 연구는 TFCC로서의 스토킹이 단순한 디지털 괴롭힘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전략적 통제 방식을 밝히며, 가해자의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차단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을 포함한 법적·제도적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주제어 : 강압적 통제, 스토킹, 친밀한 파트너 폭력, 젠더 기반 폭력, 디지털 감시, 피해자 보호

* 이 논문은 필자의 모나시 대학교 박사과정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지도교수(Bridget Harris, Asher Flynn, Hyein Ellen Cho)와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 모나시대학교 범죄학 박사과정 연구원·대검찰청 양성평등 전문관.

I. 서론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촉진했으나, 동시에 젠더 기반 폭력의 형태도 변화시켰다. 기존의 정보통신 기술(예: 인터넷, 모바일, 소셜미디어)은 정보를 생성·저장·처리·전송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 AI, 블록체인, 가상현실(VR) 등의 기술이 결합되면서 자동화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졌다. 이는 물리적 위협을 넘어 피해자에게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며, 가해자가 강압적 통제와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Harris & Woodlock, 2019).

전통적으로 스토킹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추적하고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위치 추적 기술 등의 확산으로 스토킹은 점차 비물리적이고 기술 매개적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는 새로운 수단이 되었으며, 그 결과 여성들이 더욱 광범위한 피해를 겪고 있다(Hand, T., Chung, D., & Peters, M, 2009). 이는 디지털 기술이 젠더 권력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23년 12월, 한 군인이 저지른 범죄가 일부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적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가해자는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하다 처벌 없이 제대한 후, 아내였던 피해자에게도 실시간 온라인 방송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하도록 강요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가해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피해자를 방 안에 감금한 채 카메라 감시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성인 방송을 지속하도록 통제했다.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가해자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결국,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고립 속에서 피해자는 유서를 남기고 방 안에서 숨졌다. 그러나 가해자는 1심에서 감금 및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KBS, 2024).

이 사례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가해자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피해자의 삶을 전방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해자는 부부 관계의 특성을 이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일상 활동에 쉽게 접근했으며,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감시하고, 피해자의 외부 소통을 차단했다. 피해자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음에도, 가해자의 지속적인 감시와 협박으로 인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어디에도 안전한 연결망을 만들 수 없

다는 절망감 속에서 극단적인 고립 상태로 몰렸다. 반면, 가해자는 디지털 기술을 역으로 활용하여 피해자의 모든 움직임을 장악하며, 물리적 폭력 없이도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개별 범죄가 아니라, 기술 매개 강압적 통제(Technology-Facilitated Coercive Control, 이하 TFCC)의 전형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Dragiewicz 외(2019)는 TFCC 개념을 통해, 디지털 기술이 가해자의 통제력을 확장하고 피해자를 장기적으로 옥죄는 방식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가해자는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24시간 감시하고,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동을 추적하며,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통제한다. 또한,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제작하고 공유함으로써 협박을 지속할 수도 있다. TFCC의 핵심을 물리적 폭력 없이도 피해자가 통제받고 있다는 공포를 느끼도록 만드는 데 있다. 이는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젠더 권력 관계 속에서 기술이 어떻게 통제의 도구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국내 가정폭력 실태조사(2022)에 따르면,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의 폭력 유형(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제 폭력) 중 통제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제는 단발적인 폭력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여성 피해자들은 이러한 통제의 장기적인 영향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여성가족부, 2019:215).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 전반을 지배하며,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 물리적 폭력보다 더욱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Stark(2007)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성적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여받은 특권이 개별적인 행위를 지배의 패턴으로 형성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즉, 강압적 통제는 단순한 개인적 폭력이 아니라, 구조적 젠더 불평등과 맞닿아 있는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이 친밀한 관계에서의 강압적 통제를 어떻게 지속·강화하는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적·정책적 대응 방안을 탐색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이 강압적 통제의 도구로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기술을 악용한 스토킹과 강압적 통제에 대한 법적·정책적 대응방안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판례 분석을 통해 기술 매개 강압적 통제(TFCC)의 행위 중 네 가지 유형-감시(Surveillance), 정보통제(Information Control), 위협 및 협박(Threats & Intimidation),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을 도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국내에서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 행위 자체는 독립적인 범죄 유형으로 규정되지 않지만, 이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예: 폭력, 스토킹, 감시 등)는 각각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압적 통제 행위를 논의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법적 대응이 개별 행위 단위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한국 법원의 17개 스토킹 판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피해자를 감시·통제하는 방식과, 법적 대응의 한계를 검토한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차량이나 소지품에 GPS 장치를 부착해 위치를 추적하는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분석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이러한 기술적 감시를 차단하는 데 실효성이 있는지 평가한다.

또한, 한국의 법적 대응을 보완하는 관점에서,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사례를 간단히 참고하여 법적·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젠더 기반 폭력의 새로운 양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조명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려 한다.

II. 기술 매개 강압적 통제와 디지털 감시

1. 확장되는 감시와 지배: 디지털 기술과 강압적 통제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는 피해자의 자율성과 자유를 체계적으로 제한하는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의 형태이다. Stark(2007)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험을 분석하며, 피해자들이 신체적 폭력보다 지속적 감시, 통제, 심리적 억압을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삶 전반을 지배하는 방식에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통제가 포함됨을 시사한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강압적 통제의 방식을 더욱 정교하고 광범위하게 만들고 있다.

강압적 통제 개념은 Duluth Power and Control Wheel 모델(Pence & Paymar, 1993)에서도 구체화되었다. 이 모델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삶을 지배하는 다양한 방식—통제, 협박, 사회적 고립, 경제적 착취 등을 설명하며, 강압적 통제가 물리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논의는 이후 강압적 통제의 법제화로 이어져, 영국(Serious Crime Act 2015)과 호

주 일부 주(NSW)에서 강압적 통제가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서 이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Walklate, S., & Fitz-Gibbon, K., 2019). 이 법은 현재 또는 이전의 친밀한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 강압적 통제 행위에 적용된다. UN Women(2015)도 강압적 통제를 권리와 자유에 대한 비대칭적 제약, 박탈, 처벌을 통해 피해자의 순응과 의존을 강요하는 전략으로 규정하며, 이를 젠더 기반 폭력의 핵심 요소로 평가했다.

최근 호주 eSafety Commissioner(전자안전위원회, 2024)는 강압적 통제를 개별적인 행동이나 사건이 아니라 통제 행동의 패턴임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끊임없이 조종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겁을 주는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였다. 기술적 통제는 스토킹 행위의 수단일뿐만 아니라, 친밀한 파트너 폭력에서 수반되는 강압적 통제의 핵심적 도구 중 하나로 인식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호주의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실무자 약 5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Woodlock 외, 2019)에서, 98%가 자신이 지원한 피해자가 기술 기반 강압적 통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여성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명 중 2명은 파트너가 온라인에서 그들을 학대 및 위협하거나, 그들을 통제 및 스토킹 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Boxall H & Morgan A, 2021).

국내에서는 강압적 통제와 관련한 인식이 부족하고 법적 개념이 도입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피해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감시와 통제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이며(Poushter, 2016), 이러한 환경에서 디지털 기술은 강압적 통제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부족한 인식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학습된 관계 패턴으로 받아들이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Stark, 2007). 즉, 반복적인 조작과 통제를 경험하면서도 이를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무력함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강압적 통제가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규명하며, 이에 대한 법적·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허민숙(2012, 2021)은 강압적 통제를 물리적 폭력과는 별개로 작동하는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폭력 형태로 규명하며, 특히 법적·정책적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허민숙(2012)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험을 분석하며, 강압적 통제가 피해자의 심리적·사회적 자율성을 어떻게 제한하는지를 탐색하였고,

2021년 연구에서는 한국 법제 내에서 강압적 통제를 독립적인 범죄로 인정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민윤영(2021)은 강압적 통제 범죄가 기존의 형법적 개념으로 범죄에 이르지 않았던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학대 등이 누적되어 구축되는 강압과 통제의 패턴을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범죄의 실체와 법적 수용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김정혜(2023)는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이 일반적인 스토킹과 달리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적 정보, 취약점, 인적 관계를 악용하여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반면 형사사법적 대응은 더 관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한국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젠더 기반 폭력으로서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논의한 것이다. 또한, 김효정(2024)은 한국의 가정폭력 실태를 분석하며, 강압적 통제의 다양한 양상이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종속을 심화시키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렇듯 국내에서 강압적 통제는 주로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의 양상으로 인식되며, 현행 스토킹 처벌법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존 논의들은 법·정책적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며, 후속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기존 강압적 통제 개념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존 강압적 통제 개념은 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물리적 이동을 제한하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디지털 기술을 통한 감시와 통제는 물리적 거리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만들어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삶을 직접적인 물리적 개입 없이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위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강압적 통제의 새로운 차원이 등장하였다. 스마트폰,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 원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적 도구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키며,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감시와 위협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Dragiewicz et al.(2019)가 제안한 기술 매개 강압적 통제(Technology-Facilitated Coercive Control, 이하 TFCC) 개념은 이성애 관계를 중심으로 한 폭력에 초점을 맞추었던 Stark(2007)의 강압적 통제 개념에서 나아가, 가부장적 젠더 규범 자체가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을 사용한 권력의 작동방식에 주목하였다. 이 개념은 기술이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가해자의 감시, 통제, 협박을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게 하며 기술이 피해자를 학대적 관계에 가두는 전략으로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게 한다(Dragiewicz et al., 2019).

2. 추적과 지배의 전략: 스토킹과 디지털 감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는 피해자의 신체적 이동을 제한하거나, 가정 내에서 감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피해자가 어디에 있는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으며, 물리적 접근 없이도 효과적인 통제를 수행할 수 있다(Dragiewicz et al., 2019). Stark(2007)의 강압적 통제 개념이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감시, 경제적 통제 등을 포함하는 점을 고려하면, TFCC는 기존 강압적 통제의 방식이 디지털화되면서 더욱 정교하고 강력해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GPS 추적기, 온라인 계정 해킹 등은 가해자의 통제력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Dragiewicz 외(2019)에 따르면 TFCC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

〈표 1〉 기술 매개 강압적 통제 행위

-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괴롭힘
- GPS 데이터를 이용한 스토킹
- 음성 및 영상 콘텐츠를 몰래 혹은 공공연하게 녹음
- SMS(문자 메시지)를 통한 협박
- 이메일 감시
- 온라인 계정 무단 접근
- 온라인에서 현재 혹은 과거의 파트너를 사칭하기
-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도싱(doxing)
- 강압적 통제를 확립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 또는 영상을 생성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Dragiewicz et al., 2019; Woodlock, 2017)

TFCC는 단순한 개인적 폭력이 아니라, 가정폭력을 포함한 친밀한 파트너 폭력이 가족적, 문화적, 구조적 젠더 불평등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통제적인 행동 패턴이라는 점에 기반을 둔다(Dobash & Dobash, 1979). 기존의 강압적 통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억압하지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더라도, 가해자는 GPS 위치 추적기, 소셜 미디어 감시, 원격 모니터링 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스토킹은 강압적 통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동하며,

가해자의 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GPS 추적과 소셜 미디어 감시는 피해자의 이동과 사회적 관계를 제한하는 핵심 도구로 사용된다(Fraser et al., 2010; Reyns & Fissel, 2020). 연구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없이도 온라인을 통해 감시하고 통제하는 행동으로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무력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oodlock, 2017).

eSafety Commissioner(전자안전위원회, 2024)는 강압적 통제와 관련된 학대적 행동 패턴을 구체적으로 다루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토킹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를 통한 위협적 메시지 발송, 위치 추적, 이메일 및 계정 해킹, 사적 정보의 무단 공개 등은 기술 매개 강압적 통제의 주요 행위로 규정된다. 이러한 행위는 개별적인 사건으로 보일 수 있지만, 피해자의 일상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 통제의 일부로 작동한다.

한민경(2021)의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우리 법원은 스토킹 행위를 단편적 사건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스토킹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스토킹 행위는 처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2023년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를 명확히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지만, 여전히 '지속성'과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 즉, TFCC의 핵심 특성인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통제 행위가 법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2020-2023)은 기술을 이용한 강압적 통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킨 시기였다.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물리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가해자의 통제에 더욱 취약해졌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시와 협박이 폭력의 주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Powell et al., 2024).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폭력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신고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 것이었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1). 피해자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외부와 연결될 가능성을 가졌지만, 오히려 이러한 기술이 가해자의 감시 도구로 활용되면서 더욱 큰 좌절감과 공포를 경험했다.

디지털 기술은 피해자 보호의 잠재적인 도구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여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는 이중적 딜레마를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원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데 필수적인 도

구가 될 수 있지만, 가해자가 이를 해킹하거나 감시 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피해자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더욱 제한하며 피해자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Fiolet et al., 2021).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실제 판례에서 강압적 통제의 맥락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토킹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해외에서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강압적 통제는 젠더 기반 폭력의 핵심으로 활발히 논의되어 왔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이러한 통제 메커니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강화하는지에 대한 연구로서 디지털 기술이 피해자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III.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연구자료는 한국 법원의 스토킹 관련 사건의 판례로 구성되었다. 국내에서는 강압적 통제와 관련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일부 처벌이 가능하나, 영국과 호주와 같이 친밀한 파트너 폭력 또는 가정폭력으로서 강압적 통제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 매개 강압적 통제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의 GPS 데이터 등을 이용한 위치 추적 시도의 스토킹 관련 판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자료 수집은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케이스노트(CaseNote) 판결문 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여 2023년부터 1년간의 판례를 검토하였다. 이 시기는 코로나19 이후의 시기로 기술의 사용이 증가하였다. 디지털 온라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의사소통이 증가하면서 공적 공간에서의 활동은 위축된 반면 사적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은 크게 증가하였다(김효정, 2020).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가족 간 스트레스 증가가 아니라 ‘강압적 통제 시간의 증가’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립을 초래하는 영향을 가져왔다(김홍미리, 2021). II.-2장에서도 언급하였듯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가정 폭력 및 강압적 통제가 증가하였다는 Powell 등(2024)의 연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시기는 기술을 매개로한 강압적 통제의 새로운 양상과 피해자의 경험에 의미있는 변화를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강압적 통제의 형태 중 하나로 GPS 등의 기술을 이용해 ‘위치 추적’을 시도한 사건들에 주목하였다.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강압적 통제 맥락에서 이루어진 스토킹 행위를 중심으로 판례를 검토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거나, 금전적 분쟁, 증간소음 등으로 인한 원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 등은 분석자료에서 제외하여 자료를 선정하였다. 주로 판례에 ‘교제 후 헤어진 관계, 내연 관계,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인 관계, 과거 부부관계’로 명시된 사건들이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다만, 단순한 관계 같거나 일시적인 스토킹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통제 패턴으로 볼 수 있는 스토킹 사례들을 중심으로 선별하였다. 기술을 사용한 위치 추적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형사사건의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17건의 판례가 연구 자료로 선정되었다.

수집된 판결문은 사건의 중대성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번호 및 선고번호를 기준으로 검토되었으며, 한국 법원의 형사사건 분류 체계에 따라 ‘고단’(형사 1심 단독 사건)과 ‘고합’(형사 1심 합의부 사건)으로 분류된 1심 사건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판사 한 명이 심리하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과, 합의부에서 다루는 중대한 사건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연구 자료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최종적으로 선별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건의 중대성, 가해자의 행위 방식, 피해자에 대한 영향 등 강압적 통제의 전체적인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법(Case Study Method)을 기반으로 TFCC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구조적 통제 전략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사례연구법은 특정 현상이나 맥락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 사례를 정밀하게 탐구하는 연구 방법이다(Yin, 2018). 이 방법론은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한 강압적 통제와 스토킹이라는 구체적이고 복잡한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는 데 특히 적합하다. 법적 판례는 실제 사건의 맥락과 가해자 및 피해자의 행위, 법원의 판단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강압적 통제의 특성과 이에 대한 법적·사회적 대응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기능한다. 이러한 사례연구법의 장점은 법적 사건과 그 맥락을 미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기술이 스토킹과 강압적 통제의 도구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판례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추상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위치 추적기나 GPS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한 사건이나, SNS 해킹을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발송한 사건은 디지털 기술이 강압적 통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구체적 사례를 볼 수 있게 한다.

〈표 2〉 분석 자료 목록¹⁾

번호	기술 관련 주 쟁점	사용 기술	행위	판결
1	스토킹처벌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위치추적앱	지속적 메시지, 차량 위치 추적	징역형 집행유예, 보호관찰
2	스토킹처벌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위치추적기	차량GPS 부착, 지속적 메시지	위치정보법 유죄, 스토킹 공소기각
3	스토킹처벌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위치추적기	차량 위치 추적, 막대기 폭행	징역형 집행유예, 보호관찰
4	스토킹처벌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협박죄	위치추적기	차량GPS 부착, 가족 및 피해자 협박	징역형 집행유예, 보호관찰 수감 명령
5	위치정보법 위반, 주거침입죄	GPS 장치	피해자 미행, 주거 침입, 물리적 폭력	징역형, 접근금지 명령
6	스토킹처벌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GPS 장치	차량 GPS 부착 후 지속 스토킹, 협박	일부 공소기각, 위치정보법 유죄
7	스토킹처벌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주거침입죄	GPS 장치	차량 GPS 부착, 협박 메시지 발송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
8	스토킹처벌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위치추적기	협박메시지 발송 차량 GPS 부착	징역형 집행유예, 보호관찰 강의 수감
9	강제추행, 주거침입죄 위치정보법 위반	GPS 장치	강제추행, 위치 추적 후 주거침입	징역형 집행유예
10	위치정보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주거침입죄	녹음기 및 GPS 장치	차량 GPS 및 녹음기 부착, 주거침입, 감금	징역형, 스토킹 무죄
1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녹음기 및 GPS 장치	피해자 대화 녹음, 협박 메시지발송	징역형, 집행유예
12	성폭력특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재물손괴죄	위치추적기	피해자 차량 파손, 나체 동영상 유포협박	징역형 집행유예, 보호관찰
13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죄	SNS 계정 해킹	피해자 계정 무단 접근, 메시지 지속발송	일부 공소기각, 징역형 집행유예
14	위치정보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GPS 장치	차량 GPS 부착, 접근금지 위반	징역형 집행유예, 위치추적기 몰수
15	성폭력특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위치추적기	차량 GPS 부착, 피해자 폭행협박	징역형, 접근금지 명령
16	협박죄, 주거침입죄, 위치정보법 위반	GPS 장치	차량 GPS 부착, 주거침입, 협박	징역형 집행유예, 보호관찰
17	위치정보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GPS 장치	피해자 차량 GPS 부착, 지속 메시지 및 협박	징역형 집행유예,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명령

1) 분석 자료로 쓰인 판례는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지만, 사건의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례 번호는 명시하지 않았다. 특히, 피해 사례의 세부 내용이 포함된 분석 부분에서는 개인 식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례 번호 표기를 생략하였다.

IV. 분석결과

1. 디지털 감시와 정보통제: 스토킹의 전략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강압적 통제의 패턴의 일부로 위치 추적이 이루어진 총 17건의 판례를 분석한 결과, 위치 추적을 동반한 스토킹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²⁾에 따라 별도로 다루어졌으며, 이 중 약 7건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에도 해당되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이 직접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스토킹의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감시와 통제 행위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구분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GPS를 활용한 스토킹은 개인 정보 침해를 넘어, 피해자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심리적 압박과 공포를 조성하는 통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행위를 스토킹처벌법이 아닌, 정보보호 차원의 위법 행위로 간주하여 제한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두 법의 위반뿐 아니라 폭행, 협박, 모욕, 감금, 재물손괴,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다양한 범죄 유형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례를 심층 분석한 결과 위치 정보를 수집한 사례들의 기술 매개 강압적 통제 행위는 크게 즉 1) 감시(Surveillance), 2)정보통제(Information Control), 3) 위협 및 협박(Threats & Intimidation), 4)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4가지 유형은 단순한 디지털 괴롭힘이 아니라 가해자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스토킹이 반복성과 지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강압적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술이 가해자로 하여금 편재성(omnipresence)과 무장소성(Spacelessness)³⁾을 형성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TFCC는 스토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제처, 2024).

3) 편재성(omnipresence)과 무장소성(spacelessness)은 가해자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설명하는 TFCC 개념 중 하나이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면 가해자는 물리적 거리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피해자의 활동을

킹 행위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첫째로, 감시(Surveillance)는 피해자의 위치 및 일상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행위로, 스토킹의 핵심 요소인 '반복적 감시'를 디지털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 가해자는 GPS 추적기, 위치 공유 애플리케이션, 원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이는 물리적 접근이 없는 상태에서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공포감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한 사례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차량에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이동 경로를 따라가며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둘째로, 정보통제(Information Control)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온라인 계정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로, 스토킹이 피해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식과 연결된다. 정보통제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피해자가 온라인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메일을 감시하거나,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피해자가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특정인과 연락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한 사례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서 'Smart Things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10회 이상 무단으로 수집하였다.

셋째, 위협 및 협박(Threats & Intimidation)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로, 이는 스토킹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인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유발하는 행동과 맞닿아 있다. 가해자는 문자, 이메일, 소셜미디어 메시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한다. 이는 피해자가 특정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고, 자율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넷째,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과 관련하여,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의 통제로 사회적 관계망에서 고립되는 경향이 있으며, 기술 매개 강압적 통제는 이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SNS 계정을 해킹하여 타인과의 소통을 차단하거나, 피해자의 디지털 공간을 통제하여 온라인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감시와 협박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감시하고 개입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가 항상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심리적 압박과 불안을 초래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는 공간의 제약이 사라져, 가해자는 피해자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개인적인 공간마저도 침해할 수 있다 (Dragiewicz et al., 2019).

4) 이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 홈 자동화 및 IoT(Internet of Things)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가 집안의 여러 기기를 하나의 앱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자발적으로 철수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지망이 약화된다. 또한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한 가지 기술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디지털 감시 기술을 조합하여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위치추적기의 사용뿐 아니라, 스마트폰 앱, 피해자의 SNS 계정, 이메일의 해킹 후 모니터링 등의 방식이 결합되었다. 평균 2.47개의 기술이 사용된 점을 미루어볼 때, 가해자는 단순 감시를 넘어 다층적이고 정교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7개의 판례에서 나타난 기술의 활용 방식은 TFCC의 핵심 요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3〉 분석 결과: 기술 매개 강압적 통제(TFCC) 유형 분류

TFCC 유형 구분	기술적 수단	범죄 유형	판례수
감시 (Surveillance)	GPS 위치추적기	피해자 이동 감시 및 실시간 추적	13건
	스마트폰 위치 추적 앱		7건
정보통제 (Information Control)	온라인 계정 무단 접근 및 개인정보 탈취	개인정보 탈취 및 감시	1건
위협 및 협박 (Threats & Intimidation)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통한 협박	나체 사진 및 영상 유포 위협 및 협박	3건
		위협성 메시지 및 협박	12건
사회적 고립 (Social Isolation)	SNS 메시지를 이용한 괴롭힘	온라인 괴롭힘 및 소셜 미디어 통제	6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스토킹 유형은 피해자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감시(Surveillance)였다. 호주의 eSafety Commissioner(2024) 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 기술 매개 강압적 형태로서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차량, 가방, 자전거 등에 GPS 기기를 부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추적 앱을 설치하거나, 가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방식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공유된 정보가 강압적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본래 위치 추적이 주목적이 아닌 기술(AI를 이용한 IoT 등)조차 가해자의 통제 전략에 포함되며, 이러한 기술이 스토킹 범죄에 악용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판례 분석 결과, 위치 정보 수집의 주요 목적은 여성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감시 행위 이후 물리적 폭력이 동반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피해자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심리적·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젠더 폭력의 일환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Lyon(2003)은 감시를 ‘돌봄(care)’과 ‘통제(control)’ 사이의 연속선으로 개념화하며, 친밀한 관계에서 감시와 통제가 쉽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위치 공유나 실시간 추적이 ‘안전’에 대한 배려로 정당화될 수도 있지만,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 Harris & Woodlock(2022) 역시 가해자가 자신의 통제 욕구를 ‘돌봄(care)’으로 위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피해자가 기술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가해자는 이를 감시 및 통제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Fraser et al., 2010).

강압적 통제의 맥락에서 디지털 감시에는 대부분 협박이 동반된다. 판례 분석 결과, 12건의 사건에서 가해자는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SNS 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새로운 관계를 방해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보복하겠다는 위협을 반복적으로 발송했다. 한 사례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강압적 통제를 수행했다. Fraser et al.(2010)은 괴롭힘과 원치 않는 전화 및 문자 메시지가 피해자를 통제하려는 스토킹 전술의 전형적인 패턴을 형성한다고 논의하였다. 가해자들은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이러한 괴롭힘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와 불안을 경험하도록 만든다.

판례에서 가해자들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평균 58.2회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대다수는 단순한 연락 시도를 넘어 위협적인 언어와 감정적 압박을 포함하고 있었다. Henry & Flynn(2019)은 디지털 기술이 스토킹 및 강압적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때,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며, 특히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피해자들은 하루에 한 통의 전화나 한 건의 문자를 받는 경우라도, 반복성이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강압적 통제의 패턴 속에서 심각한 심리적 위협을 경험할 수 있다(Woodlock, 2018).

2. 디지털 통제를 통한 사회적 고립과 성적 강압

감시뿐 아니라 정보통제(Information Control) 및 성적 강압(Sexual Coercion) 역시 TFCC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정보통제는 피해자의 이메일, SNS 계정 등

을 무단으로 해킹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돌려 협박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전략적 통제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판례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6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SNS를 해킹하거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위협한 사례가 발견되었고, 3건에서는 피해자가 성적 강압을 경험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자 차량에 GPS를 부착하고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하여, 피해자가 누구와 연락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했다.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의 연락을 차단하자, 가해자는 피해자의 SNS에 악의적인 게시물을 올려 피해자에게 사회적 불이익을 주려 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특정 남성과의 대화를 확인한 후,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분석 자료에서 일부 내용 발췌)

이처럼 가해자는 피해자의 디지털 공간을 통제하며 사회적 관계를 차단하려 하며, 피해자는 끊임없는 감시와 정보 침해로 인해 온라인에서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국 피해자는 SNS 계정을 삭제하거나, 지인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활동을 스스로 제한하게 된다. 사회적 고립이 심화될수록 가해자의 통제 전략은 더욱 강력하게 작동한다. Stark(2007)에 따르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회적 연결망을 차단하고 가해자에게 더욱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은 강압적 통제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이다. 이는 피해자의 자율성과 심리적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거나 저항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Tolmie et al., 2018).

또한, TFCC가 단순한 감시와 협박을 넘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까지 침해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피해자의 성적 사생활을 감시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형태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감금한 후,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요구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협박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과

거 성적인 대화와 나체 사진을 확보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였다.

(분석 자료에서 일부 내용 발췌)

이러한 디지털 기반 성적 강압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억압의 도구로 기능한다. 피해자는 자신의 성적 사생활이 공개될 가능성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거나, 가해자의 요구를 따르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Fraser et al.(2010)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강압적 통제가 단순한 스토킹을 넘어,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수단(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협박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피해자의 고립 현상을 ‘사회적 구속(Social Entrapment)’ 개념으로 설명한다(Douglas, H; Tarrant, S; Tolmie, J., 2018). 이는 가해자의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법적·사회적 시스템, 경제적 요인 등이 결합하여 피해자가 학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의미한다.

가해자의 감시를 피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가해자는 이메일과 SNS를 통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모든 연락을 감시하고 있다는 불안감에 경찰 신고를 철회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경제적 의존성을 악용하여, 피해자가 직장을 유지하기 어렵도록 만들고 금전적 압박을 가했다.

(분석 자료에서 일부 내용 발췌)

이러한 사례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고립될 수 있으며 법적 제도가 디지털 감시 및 정보통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3. 법적 공백 속 디지털 감시: 끝나지 않는 통제

본 연구에서 분석한 17개의 판례 중 6건에서 가해자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물리적으로 접근하였다. 특히,

두 사례에서는 법원이 가해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위치추적 장치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 후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기술을 이용한 감시와 통제가 물리적 접근을 차단하는 법적 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4년 개정)에 따르면, 스톱킹 행위의 정의와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지속성'과 '반복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스톱킹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 사례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차량에 두 차례 GPS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였다. 또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지속적 메시지 발송' 또는 '반복적 주변 대기' 행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스톱킹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스톱킹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은 피해자의 물리적 공간을 침범하는 행위를 막을 수는 있지만, 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감시와 통제는 차단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 매개 강압적 통제(TFCC)의 특성을 고려하면, 가해자가 이미 피해자의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한 접근금지 조치만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는 그동안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위협성과 그로 인한 폭력의 심각성에만 집중해왔다. 그러나 강압적 통제 관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때 겪는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압적 통제 이론(Stark, 2007)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설정한 규칙과 요구에 맞춰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되는 구조에 놓이며, 이러한 패턴은 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된다.

앞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사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오랜시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였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는 점에서 극심한 두려움과 압박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가해자가 교제 당시 피해자에게 일정한 규범과 행동 양식을 요구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과거에 보였던 분노의 패턴, 보복 방식, 폭력의 수위를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가해자의 논리에 맞춰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은 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작동한다. 즉, 물리적 폭력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허용된 행동'을 학습하며, 스스로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판례를 통해 명시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서 형성된 모든

통제 양상을 완전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법적 대응이 피해자의 내면화된 통제 경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과제로 남는다. 즉, 피해자는 과거 관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가해자의 모든 행동을 해석하고 이에 맞춰 조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를테면,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이메일을 보냈다면, 피해자는 이를 단순한 메시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여전히 나를 감시하고 있으며, 내가 특정 행동을 하면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반복적으로 이메일을 보내며 경고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했거나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가해자의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 속에서, 그리고 처벌 이후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보복을 우려하며 ‘가장 안전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조차 피해자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이 현실은, 스토킹 처벌법이 강압적 통제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구조적 억압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최근 호주의 NSW(뉴사우스웨일) 주에서는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추적을 포함하도록 ‘스토킹’의 정의를 변경하였다. 기술이 교제폭력 및 가정폭력에 미치는 역할이 커짐을 인식한 것이다. 개정된 정의에 따르면 기술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개인의 활동, 커뮤니케이션 또는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거나 추적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GPS 등의 추적기를 사용하거나 온라인에서 사람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대면’ 행위와 같은 방식으로 법에 적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Crime-Domestic and Personal Violence Act 2007, NSW legislation).

현재 법 체계에서 피해자의 직접적인 신고와 증거 제출을 범죄 성립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기술을 이용한 강압적 통제와 감시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인지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가해자의 통제는 지속되고 법적 대응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스토킹 처벌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여전히 신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억압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법은 가해자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단순한 가해자 처벌이 아니라 TFCC의 특성을 반영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와 법적·제도적 개입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V. 법적 대응의 한계를 넘어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이 친밀한 파트너 폭력에서 강압적 통제(TFCC)의 핵심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판례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기술 매개 강압적 통제(TFCC)의 맥락에서 스토킹 사건들은 감시(Surveillance), 정보통제(Information Control), 위협 및 협박(Threats & Intimidation),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의 네 가지 행위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통제 방식은 피해자의 직접적인 신체적 이동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행동을 검열하고 가해자의 논리에 맞춰 움직이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피해자를 향한 법적 대응의 한계는 명확하게 나타났다. 연구에서 분석한 17개 판례 중 6건에서 가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했으며, 4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하여 법적 절차가 중단되었다. 이는 법적 조치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특히, GPS 위치추적, 온라인 계정 해킹, 협박성 메시지 전송 등 기술적 수단이 물리적 접근금지 명령을 무력화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다.

현재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감시와 통제 행위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즉, 법원은 GPS 등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으며, 스토킹처벌법과 분리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구분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위험이 크다. GPS를 이용한 스토킹 행위는 단순한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라, 피해자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심리적 압박과 공포를 조성하는 통제 방식으로 작동한다. 피해자는 자신의 위치가 추적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체적 위협을 느낄 수 있고, 그 결과, 생활 반경을 축소하거나 특정 행동을 자제하는 등 자율성을 침해당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맥락에서 기술 매개 강압적 통제(TFCC)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TFCC를 단독 범죄로 규정하는 것보다, 기존 법률 내에서 그 특성을 반영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의 선행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 특히, 수많은 교제 폭력 사건에서 나타나는 기술을 이용한 강압적 통제의 방식에 주목하고, 이를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기술 매개 젠더 폭력의 구조적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법원이 가해자의 디지털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더욱 실효적인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법원은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기술을 활용한 감시와 통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부족하다. 기술적 감시를 법원이 직접 차단할 수 없을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분리해서 다루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스토킹 범죄에서 위치 추적 등의 디지털 감시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법원은 기술적 감시 행위를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로 단순한 사생활 침해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선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거나, 온라인 계정을 해킹해 정보를 탈취하는 행위는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폭력 행위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법적 판단 기준을 기술적 감시 및 정보통제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구조적 억압의 맥락에서 재정립해야 한다. 호주는 뉴사우스웨일(NSW) 주를 중심으로 GPS 등을 이용한 감시를 스토킹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으며, 법원이 가해자의 디지털 감시 도구를 차단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TFCC는 단순한 감시나 괴롭힘이 아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논리에 맞춰 스스로 행동을 조정하게 만드는 구조적 폭력이다. 강압적 통제 이론(Stark, 2007)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설정한 규칙과 요구에 맞춰 행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이며, 이러한 패턴은 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된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이메일 한 통, GPS 위치 조회 한 번에도 큰 두려움을 느끼거나 ‘내가 특정 행동을 하면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TFCC는 단순한 기술적 감시가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억압의 구조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다. 본 연구는 스토킹처벌법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강압적 통제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한, 가해자의 통제는 끝나지 않는다.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의 기술적 감시와 정보통제는 단순한 스토킹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젠더 기반 폭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TFCC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부실할 경우, 피해자는 계속해서 자신을 통제하는 가해자의 논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법의 공백’이 가해자의 끝없는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다.

참고문헌

- 김정혜(2023). “강압적 통제로서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의 특성과 대응 방향”. *여성연구*. 제117권 제2호. 39-62.
- 김흥미리(2021). 코로나19 시기 ‘집안’은 안전한가?: 가정폭력 신고율 하락의 의미. *젠더이슈*. 2021년 208호. 1-8.
- 김효정(2020). “코로나19와 가정폭력:팬데믹의 젠더화된 효과”. *여성연구*. 제109권 제4호. 5-29.
- 김효정(2024). “강제된 동의, 강요된 관계: 교제폭력 피해자의 경험을 통해 본 강압적 통제의 메커니즘과 자유 탈환을 위한 여성 행위성”. *여성학논집*. 제41권 제1호. 69-105.
- 민윤영(2021). “가정폭력 범죄로서 강압적 통제의 법적 수용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32권 제2호. 31-62.
- 법제처(20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23년 1월 12일 시행.
- 여성가족부(2022). *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CaseNote(2024.8.1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https://casenote.kr/>에서 2024.08.15. 인출.
- 한민경(2021). “법정에 선 스토킹: 판결문에 나타난 스토킹 행위의 유형과 처벌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제37권 제1호. 65-92.
- 허민숙(2012). “폭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 친밀한 관계에서의 강압적 통제와 가정폭력 재개념화를 위한 연구”. *페미니즘연구*. 제12권 제2호. 69-103.
- 허민숙(2021). “국가가 초래한, 국가가 알지 못하는 위험: 친밀한 관계에서의 강압적 통제”. *한국여성학*. 제37권 제1호. 223-251.
- KBS(2024.07.12). “아내 성인방송 강요한 전직 군인 징역 3년 선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10359&ref=A>
 에서 2024.11.30. 인출.
- Powell, A., Flynn, A., Wheildon, L., & Bentley, K.(2024). *Understanding the impact of COVID-19 on responses to technology-facilitated coercive control*(Trends & Issues in Crime and Criminal Justice No. 698).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 Boxall, H., & Morgan, A.(2021). *Experiences of coercive control among Australian women*. Statistical Bulletin no. 30. Canberra: Australian

- Institute of Criminology.
- Dobash, R. E., & Dobash, R.(1979). *Violence against wives: A case against the patriarchy*. New York: Free Press.
- Dragiewicz, M., Woodlock, D., Harris, B., & Reid, C.(2019). Technology-facilitated coercive control. In W. S. DeKeseredy, C. M. Rennison & A. K. Hall-Sanchez(Eds.), *The Routledge international handbook of violence studies*(pp. 244-253). Routledge.
- Douglas, H; Tarrant, S; Tolmie, J.(2018). *Social Entrapment Evidence: Understanding Its Role in Self-Defence Cases Involv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Law Journal*, 41(3), 813-838
- Pence, E., & Paymar, M.(1993). *Education groups for men who batter: The Duluth model*. Springer Publishing.
- eSafety Commissioner.(2024). *Report on the use of GPS tracking and smartphone applications in stalking and coercive control*.
- Fiolet, R., Tarzia, L., Owen, R., & Hegarty, K.(2021). *Exploring the impact of technology-facilitated abuse and its relationship with domestic violence: A qualitative study on experts' perceptions*. *Social Media + Society*, 7(3).
- Fraser, C., Olsen, E., Lee, K., Southworth, C., & Tucker, S.(2010). *The new age of stalking: Technological implications for stalking*. *Juvenile & Family Court Journal*, 61(4), 39-55.
- Harris, B. A., & Woodlock, D.(2019). Digital coercive control: Insights from two landmark domestic violence studie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59, 530-550.
- Harris, B., & Woodlock, D.(2023). Weaponising technology in intimate relationships: An introduction and overview. In B. Harris & D. Woodlock(Eds.), *Technology and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Victimisation, Perpetration and Responses* (pp. 1-16). Routledge.
- Hand, T., Chung, D., & Peters, M.(2009).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coerce and control in domestic violence and following separation (Stakeholder Paper 6)*. Australian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Clearinghouse, UNSW.
- Henry, N., & Flynn, A.(2019). *Image-based sexual abuse: The extent,*

- nature, and predictors of victimization in a community sample.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19(1), 46-65.
- Lyon, D. (Ed.).(2003). *Surveillance as social sorting: Privacy, risk, and digital discrimination*. Routledge.
- New South Wales Government.(2007). Crimes(Domestic and Personal Violence) *Act 2007 (NSW)*. NSW Legislation.
- Pence, E., & Paymar, M.(1993). *Duluth Power and Control Wheel Model*.
- Poushter, J. (n.d.). *Smartphone ownership and internet usage continues to climb in emerging economies but advanced economies still have higher rates of technology use*.
- Reyns, B. W., & Fissel, E. R.(2020). *The current state of cyberstalking research: A review of the emerging literature*. Sociology Compass, 14(9), e12828.
- Stark, E.(2007). *Coercive control: How men entrap women in personal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olmie, J., Smith, R., Short, J., Wilson, D., & Sachi, J.(2020). *Social entrapment: A realistic understanding of the criminal offending of primary victim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 UN Women. (2015). *A framework to underpin action to prevent violence against women*.
- United Kingdom.(2015). *Serious Crime Act 2015, c. 9*. The National Archives.
- Walklate, S., & Fitz-Gibbon, K.(2019). *The Criminalisation of Coercive Control: The Power of Law?*, International Journal for Crime, Justice and Social Democracy, 8(4), 94-108
- Woodlock, D.(2017). The abuse of technology in domestic violence and stalking. *Violence Against Women*, 23(5), 584-602.
- Woodlock, D., Makenzie, M., Western, D., & Harris, B.(2019). Technology as a weapon in domestic violence: Responding to digital coercive control. *Australian social work*, 73(3), 368-380
- Yin, R. K.(2018). *Case study research and applications: Design and methods* (6th ed.). Sage Publications.

Abstract

Invisible entrapment: Stalking as Technology-Facilitated Coercive Control*

Sungshin Luna Bae**

The advancement of digital technology has extended coercive control and stalking beyond physical proximity. This study examines Technology-Facilitated Coercive Control (TFCC) through an analysis of 17 South Korean court rulings on stalking cases, demonstrating how perpetrators utilise GPS tracking, social media surveillance, account hacking, and coercive messaging to exert control and restrict victim-survivors. Findings indicate that stalking facilitated by location tracking manifests through four core mechanisms: surveillance, information control, threats and intimidation, and social isolation, ultimately coercing victim-survivors into adjusting their behaviors in response to persistent fear and control. Despite legal reforms, judicial responses to TFCC remain inadequate, as digital surveillance is often classified as a privacy violation instead of being recognised as stalking. Restraining orders often fail to address technological abuse, allowing perpetrators to maintain control through ongoing monitoring. This study highlights the urgent need to integrate TFCC into the existing legal frameworks while strengthening institutional awareness and protective measures against digital coercion.

Keywords : Coercive Control, Stalking, Coercive Control, Gender-Based Violence (GBV),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Victim-Survivor Support

* This paper draws on insights gained through the author's PhD journey at Monash University. I am grateful to my supervision team(Bridget Harris, Asher Flynn, Hyein Ellen Cho) and the anonymous reviewers for their valuable feedback.

** PhD candidate in Criminology, Monash University · Gender Equality Specialist,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of Korea.